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2015-1081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주문

대구일보 2015년 3월 24일자 26면 「봄철 야외활동대비 안전점검 철저히 해야」·「일 태도 변화가 한중일 관계 복원의 열쇠다」 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대구일보는 위 적시 2건의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봄철 야외활동~>= 『강화도 사설 캠프장에서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났다. 임대용 대형텐트 내부에서 불이나 순식간에 전소됐고, 날씨가 풀리는 봄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던 두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해당 캠프장은 미신고시설이어서 안전점검도 없었고, 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익숙히 보아온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이나 유형, 문제점이 거의 같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관련 제도뿐 아니라 안전문화와 의식개선이 이뤄지지않고 있다는 뜻이다.

가깝게는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의 한 펜션 바비큐시설에서 불이나 대학 동아리회원 등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에 불이 순식간에 번져 희생자들이 대부분 미처 빠져나오지못한 채 질식사하는 등 피해가 컸다. 바비큐 시설 자체도 불법건축물이었다.

사고가 나자 전국 지자체는 일제히 펜션 및 민박 등 여가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이는 등 호들갑을 떨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관광진흥법 아래 관리되던 야영장이 전국에 1천800여개소로 추정되는 시설중 230곳에 불과해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시설에 등록기준을 정하고 시군구별로 신고토록 했으나 아직은 유예기간중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캠프장도 아직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를 하지않은 채 영업행위를 해와 소방서의 점검도 받지않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결국 제도의 허점과 시설 운영자의 허술한 안전의식이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공범인 셈이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게다가 잇단 캠프장 사고에서 보듯이 야외에 설치된 여가시설은 대부분 화재에 극도로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번에도 5M 높이의 대형천막이 불과 1분만에 재만 남고 흔적도 없이 소실됐다. 규정에 따르면 야영장에는 대피소와 관리요원을 두게 되어있는 등 등록기준이 있지만 경험상 점검과 관리가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후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고를 줄이려면 텐트를 불에 잘 안타는 소재로 만들어 비치토록 하는 등 시설기준을 엄격히 하고, 예고 없는 불시 안전점검을 상시화 하는 등 당국의 적극적 안전제고 의지가 여가업계에 각인되고, 안전우선 문화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제 겨우내 움츠러들어있던 몸과 마음에 새봄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너도나도 야외로 나가게 되는 봄이다. 사후 약방문격이라도 당국이 안전을 위해 매우 바빠져야 한다는 뜻이다.』

〈일 태도 변화가~〉=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3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돼 공동합의까지 도출하면서 역사·영토 문제로 파행을 빚어온 3국 관계에 일단 해빙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지난 3년간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과 한일간 과거사 갈등으로 인해 아예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고, 그전 2년간은 3국간 의견 불일치로 공동 발표문 형식의 합의문을 낼 수가 없었다. 그동안 3

국은 개별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한 적이 있지만 이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올해 안에 정상회의가 성사될수 있다면 3국 관계 복원은 급진전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의 성사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3국 외교장관 회담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옆에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올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주년을 맞았지만 3국의 역사 문제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남아 있다. 이를 미래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최고 외교관이 상대국 외교수장과 함께한 공식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은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대한 매우 강도높은 비판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3국 차원의 협력은 조기에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정상회담 실현은 어렵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일본이 어떤식으로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셈이다.

열쇠를 쥐고 있는 일본에게는 앞으로 수개월내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두 번의 기회가 열려있다.

내달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총리의 미 의회 합동연설과 오는 8월로 예정된 아베 담화가 그것이다. 이 두 번의 기회에서 일본이 변화된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한중일 관계 복원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진정성 있는 일본의 과거사 태도 변화가 연설과 담화에 담길 경우, 한중일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내일을 향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동북아의 갈등은 고조될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측을 적극 설득하고, 사드 도입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고차방정식의 해법에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할 때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의 위 적시 사실들은 연합뉴스가 3월 22일 16:24 송고한 「봄철 야외활동 대비 안전점검 철저히 해야」 제목의 '연합시론'과 같은 날 10:45 송고한 「日 태도 변화가 한중일 관계 복원의 열쇠다」 제목의 '연합시론'에서 각각 한 문장, 세 문장만을 삭제한 채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제목도 '연합시론' 제목과 같다.

그런데도 출처에 대한 표시나 설명은 없다.

신문의 사실이 해당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의 개진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 표절행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라는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사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 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 「평론의 원칙」 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23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일보 발행인 김용석

주문

서울일보 2015년 4월 27일자 1면 「朴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30%대 중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서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 파문 영향으로 2주 연속 30%대 중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4월 넷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5%로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상승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57%를 기록했다.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성완중 리스트 파문으로 큰 하락폭을 기록한 지난주에 이어 30%대 중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그 격차는 3월 이후 최대치인 22%포인트로 확대됐다.

세대별 지지율은 60세 이상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45%, 30대 22%, 40대 21%, 20대 15%의 순이었다. 60대 이상과 30대에서 지난주에 비해 지지율이 각각 4%포인트, 10%포인트 오른 반면 50대와 40대는 2%포인트, 6%포인트 떨어졌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일보는 뉴시스가 지난 4월 24일 11:37 송고한 「박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30%대 중반에 머물러」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

서울일보는 같은 사안으로 올 들어 신문윤리위원회 제883차, 제885차, 제886차 회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한 표절 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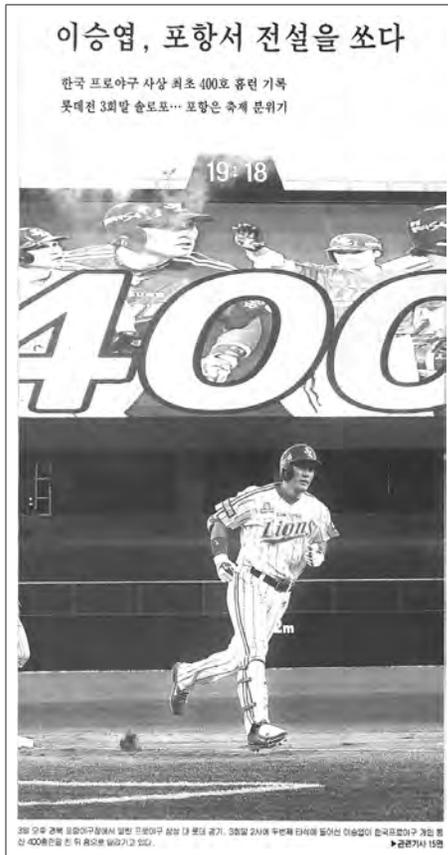
2015-119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윤 두 영
2.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주문

경북도민일보 2015년 6월 4일자 1면 「이승엽, 포항서 전설을 쏘다」 제목의 사진, 경북일보 6월 4일자 1면 「드디어 터졌다」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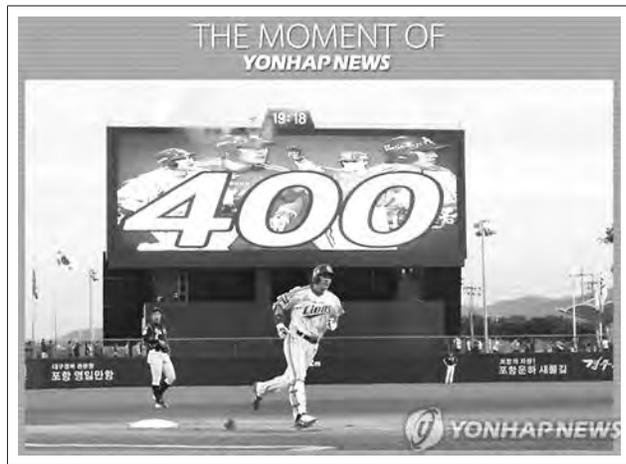
이유



경북도민일보 6월 4일자 1면



경북일보 6월 4일자 1면



연합뉴스 6월 3일 21:27 전송

경북도민일보와 경북일보는 프로야구 삼성의 이승엽이 지난 6월 3일 오후 경북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한국프로야구 개인 통산 400 홈런을 친 뒤 홈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담은 연합뉴스 21:27 전송 사진을 트리밍을 해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9 신문윤리강령 위반

慶南日報 발행인 이재근

주문

慶南日報 2015년 8월 27일자 12면 왼쪽 상단 「세계명문대학 조정 축제」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慶南日報의 위 사진은 26일 대구 낙동 조정 경기장에서 열린 '2015 세계명문대학 조정 축제'의 한 장면을 보도한 것이다. 이 대회에는 대한민국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와 영국 캠브리지대, 미국 MIT(매사추세츠공대), 호주 멜버른대 등 4개 대학 60여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慶南日報는 이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사진은 이 날자 연합뉴스 헬로포토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다.

이런 보도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328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명국

주문

내일신문 2015년 11월 13일자 7면 「백악관행 대장정 개막전 카운트다운 들어가」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내일신문 11월 13일자 7면 사진



연합뉴스 10월 28일 17:55 송고 사진

내일신문은 연합뉴스가 10월 28일 17:55에 송고한 사진을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5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4.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광 래
5.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주문

경향신문 2016년 2월 4일자 24면 「이대호의 뜻심에 …/응답했다, 시애틀」 제목 기사의 관련 사진, 중앙일보 2월 4일자 26면 「이젠 적이다, 미국서 다시 만난 부산 친구<초등학교 동창>」 제목 기사의 관련 사진, 東亞日報 2월 5일자 A26면 「스프링 캠프 ‘바늘 구멍’ 뚫어라」 제목 기사의 관련 사진, 스포츠서울 2월 5일자 3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 이대호 “주전 될 자신 있다”」 제목 기사의 관련 사진, 한국일보 2월 5일자 26면 「34세 이대호 자존심보다 꿈 택했다」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위 신문들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 2월 4일자 24면 사진



중앙일보 2월 4일자 26면 사진



東亞日報 2월 5일자 A26면 사진



스포츠서울 2월 5일자 3면 사진



한국일보 2월 5일자 26면 사진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한국인 거포 이대호가 29일 일본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일본시리즈 5차전 4회초 1사 3루에서 좌월 투런 홈런을 때려내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 교도=연합뉴스)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한국인 거포 이대호가 29일 일본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일본시리즈 5차전 4회초 1사 3루에서 좌월 투런 홈런을 때려내고 있다. 2015.10.29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5 WBSC 프리미어12 대한민국과 일본의 준결승 경기, 9회초 무사 만루 한국 이대호가 좌전 안타를 친 뒤 기뻐하고 있다. (뉴스1)



(타오위안=뉴스1) 양동욱 기자 = 11일 오후 대만 타오위안 아레나에서 열린 2015 WBSC 프리미어12 B조 예선 2차전 대한민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기에서 7회초 1사 2루 한국 이대호가 역전 투런포를 친 뒤 환호하고 있다. 2015.11.11 (뉴스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스포츠서울은 연합뉴스가 2015년 10월 29일 송고한 일본시리즈 5차전 투런 홈런 사진을, 東亞日報은 뉴스1이 2015년 11월 11일 송고한 WBSC 프리미어12 도미니카전 투런홈런 사진을, 그리고 중앙일보는 뉴시스가 2015년 11월 19일 송고한 WBSC 프리미어12 일본전 준결승 사진을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81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최삼규

주문

국민일보(kmib.co.kr) 2015년 10월 7일자 「“선거구 확정위 또 결론못냈다”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허용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선거구 확정위 또 결론못냈다』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허용 논란

입력 2015.10.07 00:43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놓여준 지역구 의석수 감소 최소화를 위해 현행법상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는 6일 오후 8시부터 2시간20분간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 예외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은 안 났다”며 “하한·상한 인구수 산정 방식 변경도 다뤄지긴 했지만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냈지만, 새정치연합 추천 위원들은 ‘계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분할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추천 획정위원들이 대체로 여야 입장과 동일한 의견을 낸 것이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다음 회의에서도 결론을 못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획정위는 하한·상한 인구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안은 여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고 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선거구획정에 적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2대 1’을 지키는 것은 물론 농어촌 지역구 감소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획정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재소집해 지역선거구 수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최종 의결이 이뤄질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현행유지하면서도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한 방안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기자 y***m@kmib.co.kr」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가 10월 7일 0시 43분에 출고한 위 적시 기사는 ‘김영석 기자’라는 바이라인이 달려있지만 사실은 연합뉴스 김연정 기자가 이보다 약 한 시간 전인 10월 6일 23시 57분에 출고한 「획정위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예외 허용여부 결론 못내」 제목의 기사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표절 기사이다.

이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6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문

서울신문(seoul.co.kr) 2016년 1월 18일자 「유엔, ‘北외교관 초청’ 프로그램 중단 … 국제기구 핵실험 대응 이어질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연합뉴스
유엔, ‘北외교관 초청’ 프로그램 중단 … 국제기구 핵실험 대응 이어질 듯 입력 2016.01.18 15:16 수정 2016.01.18 15:16	[단독]유엔, ‘北외교관 초청’ 프로그램 중단 … “핵실험 경고 메시지” 기사입력 2016.01.18 12:30 최종수정 2016.01.18 15:00 北외교관 상대 군축 교육 연례행사 무기연기 … “올해 지원 어렵다” 다보스포럼 ‘퇴짜’ 이은 조치 … 국제기구 ‘北거부’ 움직임 이어질 듯

유엔(UN)이 북한 외교관 초청프로그램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가 4차 핵심협약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다보스포럼 참석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제기구인 북한 거부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유엔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은 1월 말쯤 시행할 예정이었던 북한 외교관 초청 군축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을 연기했다.

군축 연수 프로그램을 후원해오던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매년 1~2달 동안 북한 외교관들을 초청해 유엔이나 제네바 유엔 군축연구소, 관련 회원국 등을 돌며 시행해오던 연수프로그램은 일단 무기한 연기됐으며, 올해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에는 북한의 4차 핵심협약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축 연수 프로그램은 애초 군축이나 비확산과 관련한 국제규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북한을 긍정적 변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연수 대상도 군부 인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깥 물질'을 좀 알고 외부 세계와의 대화에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 외교관들을 상대로 이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긍정적 취지'에도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심협약과 관련, 핵개발을 계속하면 '고립'만 있을 뿐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의 발신으로 보인다.

WEF 조직위원회도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당초 북한 대표단을 초청했다가 북한이 4차 핵심협약을 감행하자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청을 취소했다.

WEF 조직위의 초청 취소에 앞서 북한 측은 조직위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리수용 의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다보스포럼 '퇴짜'와 유엔의 북한 외교관 상대 연수 프로그램 연기에 이어 북한의 4차 핵심협약에 대응한 국제기구나 양자 차원의 북한 '거부' 움직임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가 최근 4차 핵심협약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다보스포럼 참석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유엔에서도 북한 외교관 초청프로그램의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유엔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은 1월 말쯤 시행 예정이었던 북한 외교관 초청 군축 관련 연수 프로그램의 시행을 연기했다.

군축 연수 프로그램을 후원해오던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매년 1~2달 동안 북한 외교관들을 초청해 유엔이나 제네바 유엔 군축연구소, 관련 회원국 등을 돌며 시행해오던 연수프로그램은 일단 무기한 연기됐으며, 올해 불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에는 북한의 4차 핵심협약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축 연수 프로그램은 애초 군축이나 비확산과 관련한 국제규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북한을 긍정적 변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연수 대상도 군부 인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깥 물질'을 좀 알고 외부 세계와의 대화에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 외교관들을 상대로 이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긍정적 취지'에도 연수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심협약과 관련, 핵개발을 계속하면 '고립'만 있을 뿐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의 발신으로 보인다.

WEF 조직위원회도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당초 북한 대표단을 초청했다가 북한이 4차 핵심협약을 감행하자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청을 취소했다.

WEF 조직위의 초청 취소에 앞서 북한 측은 조직위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리수용 의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다보스포럼 '퇴짜'와 유엔의 북한 외교관 상대 연수 프로그램 연기에 이어 북한의 4차 핵심협약에 대응한 국제기구나 양자 차원의 북한 '거부' 움직임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185002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24997&isYeonhapFlash=Y>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1월 18일 12시 30분에 송고한 「[단독]유엔, ‘北외교관 초청’ 프로그램 중단 … “핵실험 경고 메시지”」 제목의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리드를 두 문장으로 바꾼 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통신 기사를 정보를 추가하지 않고 한 문장을 약간 바꿔 옮겨놓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사가 작성한 것처럼 편집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2015-1080 신문윤리강령 위반

무등일보 발행인 김명술

주문

무등일보 2015년 3월 25일자 19면 「야영장, 지자체에 등록해 안전사고 예방을」 제목의 사설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무등일보는 위 적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리나라 야영장 숫자는 1천866개(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록된 야영장은 230개에 불과하다.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법이 없어 관리조차 안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야영장은 오는 5월말까지 적합한 기준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등록 업체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늦게나마 관련법의 제정으로 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야영장으로 등록하려면 침수, 산사태, 고립, 유실, 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 소화기, 대피소, 대피로, 관리요원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일반야영장의 경우 천막 1개당 15㎡ 이상, 자동차야영장은 차량 1대당 50㎡의 야영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야영장들이 이 기준에 맞춰 등록하기가 쉽지 않아 현재 전남지역 43곳의 야영장 중 지자체에 등록을 한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0곳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 정도의 규정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에 불과하다.

야영장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높다. 소방방재청의 2012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야영장 안전사고 등 레저사고는 2010년 282건(인명피해 235명), 2011년 3004건(2296건), 2012년 4359건(390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레저사고 발생 때 인명피해의 비율은 76~89%에 이른다. 전남지역 각 지자체들은 이번 기회에 모든 야영장이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여부를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무등록 야영장이 받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무등일보의 위 적시 사실은 경상일보가 두 달 전인 1월 26일자 19면에 게재한 「안전사각지대 야영장, 재난 대비 위해 등록제는 필수」 제목의 사실에서 상당 부분을 문장 순서만 바꾼 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무등일보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대목은 두 번째 문단의 3개 문장과 세 번째 문단의 2개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전남지역 각 지자체들은』이라고 주어를 추가한 것뿐이다. 결론 대목인 『이번 기회에 모든 야영장이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여부를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무등록 야영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도 경상일보 사실을 그대로 베꼈다.

그런데도 출처에 대한 표시나 설명은 없다.

신문의 사실이 해당 신문사의 정체성에 근거한 의견이나 주장의 개진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 표절행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라는 차원을 넘어 해당 신문사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 부정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제9조 「평론의 원칙」 ①(논설의 정론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98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5년 6월 23일자 2면 「“잘못 인정하지만 절필은 없다” 표절 논란 입연 신경숙」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본 작가의 작품을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소설가 신경숙(52)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소설가 이웅준이 지난 16일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만이다. 신 씨는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기억을 되쳐봐도 ‘우국’을 읽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신 씨는 해당 작품을 작품집에서 빼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관련기사 11면

그럼에도 신 씨는 ‘우국’을 읽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16일 의혹이 제기됐을 때 창비를 통해 밝힌 대로 ‘우국’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15년 전, 평론가 정문순씨가 같은 사안으로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읽지 않은 작품을 갖고 표절할 리가 있느냐는 생각에 해당 평론을 읽지 않았다고 했다. 소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작별인사’, ‘엄마를 부탁해’ 등 여타 작품에 쏟아지는 표절 의혹과 제목 도용도 그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소설을 읽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나랑 생각이 똑같을까 싶은 대목이 나오고 심지어 에피소드도 똑같은 때가 있다”, “시에서 제목을 따오는 일은 당시 문단에서 종종 있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잘못을 모두 짊어지고 책상 앞으로 돌아갈겠다는 말을 남겼다. 문학은 목숨과 같은 것이어서 절필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경숙의 해명은 거짓이 있을 수 없다. 그가 애써 꾸며 말한 것도 아니다. 그가 문학을 살아온 방식, 문단의 생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번 ‘신경숙 표절 사건’의 핵심은 문단 내에서 조용히 묻힌 2000년과 다른 지점에 있다. ‘소설의 위기’라 불릴 정도로 이렇다할 소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문단 현실과 문단의 폐쇄성이 권력의 분산과 파괴가 빠르게 일어나는 SNS 소통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사회적 과장이 크다. 작가와 문단은 여전히 ‘그들만의 방’에 머물러 있는 인상이다. 출판사 창비와 신경숙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화가 나 있는 이유다. “원고를 써서 향아리에 묻더라도” 작

품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신경숙의 각오가 한편으론 공허하게 들리기도 한다. 신경숙의 표절 논란은 문학계의 반성과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연대와 한국작가회의는 23일 오후 ‘최근의 표절사태와 한국 문학권력의 현재’라는 토론회를 연다. 작가의 잘못을 막아주고 재생산해온 출판사와 비평가 그룹의 ‘침묵의 카르텔’ 구조를 어느 정도 파헤칠지 주목된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소설가 신경숙을 인터뷰한 경향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라고만 기술했다.

위 기사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주문

경향신문 2015년 7월 28일자 4면 「방미 김무성, 연이틀 큰절 … “장군님 감사합니다”」, 7월 30일자 4면 「케리 미 국무장관 바빠서 … 차관보 만난 김무성」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방미 김무성, 연이틀 큰절 ...〉= 『‘정당 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64)가 이를 연속 ‘큰절’을 했다. 현지 방위산업체에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히는 등 차기 대선 주자급 이상의 ‘대선 후보’에 준하는 행보와 격에 맞지 않는 외교로 뒷말을 낳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했다. 초대 미8군 사령관을 지낸 월턴 워커 장군 묘를 찾아서는 “한국식으로 큰절을 하겠다”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번 절을 했다.

이어 묘비에 묻은 진흙과 새똥 등을 직접 꺼낸 손수건으로 닦으며 “아이고, 장군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워커 장군님은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장본인으로 대한민국 최고 영웅이자 은인”이라며 “우리나라를 살려 주신 분들인데 절 백번 해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방미 첫날인 전날에도 6·25 참전용사·가족 만찬에서 “한국의 오랜 관습에는 존경하는 어른들에 대한 감사 표시로 큰절을 하는 관습이 있다”며 절을 올렸다.

잇따른 큰절은 ‘과공비례(過恭非禮·지나친 공손은 예의에 벗어남)’ 논란을 낳았다.

한국 제1당 대표로서 ‘정당 외교’의 격에 관해 고민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안보 이미지’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트위터에 “1883년 미국에서 큰절하는 민영익 일행과 그로부터 132년 뒤 미국에서 큰절하는 김무성 일행”이라며 두 사진을 함께 올린 뒤 “참고로 1883년 미국인들의 반응은 ‘별 희한한 것들 다 보겠네’ 정도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 사위’를 자처하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관저도 방문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록히드마틴사 관계자에게 “우리에게 F-22기를 팔겠다고 언론에 얘기를 해라. 우리가 얼마든지 사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또 “불공정 계약이 됐다고 한국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해 발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정〇〇기자』

〈케리 미 국무장관 바빠서 …〉=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64)가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번 8·15(종전 70주년) 기념사에서 역사 왜곡을 하지 말라고 미국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일본의 역사 왜곡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면담에서 “한국에는 미국이라는 친구와 자유시장을 가진 일본이 있다”며 “한국의 지위는 ‘글로벌 이슈’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예정돼 있던 김 대표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회동은 케리 장관의 의회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킨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도 면담하는 등 의회 지도자급과는 활발히 교류했다.

하지만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 당초 회동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조 바이든 부통령 등 행정부 최고위급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팔소(양꼬) 빠진 방미 외교’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무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 국무부에서 ‘케리 장관이 (이란 핵 협상 관련 보고·청문회 지체로) 의회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면담에 참석을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통지가 왔다”고 전했다.

정〇〇기자』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방미 행적을 전하는 내용이

다. 김 대표의 방미 일정에는 다수 언론사의 기자들이 동행 취재해 현지에서 기사를 송고했으나, 경향신문 기사는 바이라인에 현지에서 송고했다는 표기가 없는 것으로 미뤄 미국 현지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사는 김 대표의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면담 등을 마치 현지에서 직접 취재해서 작성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기사를 국내에서 취재했다면 간접 취재원을 밝혀야 하지만 기사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국내 통신사 등이 송고한 기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사 출처도 따로 밝히지 않고 있다.

타 매체의 기사를 일부라도 전재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2.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5.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東亞日報 2015년 8월 1일자 1면 「진흙탕 싸움 치닫는 롯데 후계분쟁」, 8월 3일자 1면 「“동빈<차남> 용서못해” … 이번엔 신격호 동영상」 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8월 1일자 1면 「“신격호, 후계자는 신동주라고 생각”」 제목의 기사, 매

일경제 8월 3일자 1면 「신격호-신동빈 오늘 ‘운명의 회동」 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 8월 3일자 1면 「신동빈 회장 오늘 귀국/辛총괄 “차남 용서 못해”」 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8월 3일자 1면 「“신동빈 권한·명분 없어/이해도 용서도 못한다”」 기사와 사진, 파이낸셜뉴스 8월 3일자 1면 「롯데가父子<신격호-신동빈> 오늘 만나/경영권 분쟁 담판 짓나」 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8월 3일자 1면 「롯데 ‘막장 드라마’ 비판여론 비등」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 세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 … 진흙탕 싸움)=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육성과 아버지의 직인이 찍힌 ‘한국 롯데그룹 회장 임명장’을 잇달아 공개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에서 일본말로 나는 대화 내용을 31일 방송에 공개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육성이 공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신동빈도) 그만두게 했잖아”라고 했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오히려 신 회장이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를 대표이사에서 내려오게 했다는 내용을 알려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을 한국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하며 차남을 후계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17일자 문서도 공개했다. 15일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만들어진 문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글씨를 쓰지는 않았지만 서명을 하고 도장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반박 자료를 내고 “경영권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에 의해 차단된 가운데 만들어진 녹취라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후략)』

(東亞日報 … ‘동빈 용서못해’)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영상이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에 의해 2일 공개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부친이 신동빈 회장을 교도소에 넣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함과 동시에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가 장남의 얼굴조차 못 알아볼 정도라고 폭로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영상에서 한국말로 “70년간 롯데그룹을 키워왔다. 오늘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둘째 아들 신동빈을 한국롯데 회장과 한국롯데홀딩스(일본 롯데홀딩스를 잘못 말한 듯)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인 저를 배제하려는 점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상은 이날 오후 신격호 총괄회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롯데호텔 34층에서 신동주 부회장 측에 의해 촬영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방송사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중국 사업에서 조 단위의 손실을 낸 동생에 대해 ‘배상을 받아라, 교도소에 넣어라’라고 했다”며 “동생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인 롯데그룹의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고령의 총괄회장을 이용해 전례 없는 동영상 을 통해 왜곡되고 법적 효력도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후략)』

(세계일보) =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에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밀려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전방위 반격에 나섰다. 방송을 통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발언과 더불어 신 전 부회장을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공개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동생인 신신호 일본 산사스 사장도 신 전 부회장을 그룹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거들고 나섰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이날 방송에서 공개한 육성 파일에는 차남 신동빈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했다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음성이 담겨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 27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롯데홀딩스 임원들을 모

아놓고 신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비롯한 이사 6명을 해임했다.

녹음에서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다카유키 사장)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라고 신 전 부회장에게 물었고,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 사장을 맡고 있다”고 답하자 다시 “그만두게 했잖아”라고 되물었다.(후략)』

(매일경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부자, 형제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일본에서 귀국할 예정이어서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신회장은 귀국하자마자 신격호 총괄회장을 알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친은 차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부자 간 만남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지는 미수지수라는 전망이다.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2일 오후 롯데호텔 34층 소재 본인 집무실에서 녹화한 것이라며 방송사에 영상을 보냈다. 이 영상에서 신 총괄회장은 “둘째 아들 신동빈을 한국 롯데회장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며 신 회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후략)』

(머니투데이)= 『3일 귀국할 예정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갈등에 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의 입장이 담긴 동영상이 이날 공개됐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통해 제공된 동영상에서 “국민여러분에게 롯데그룹과 관련,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아들 신동빈을 한국롯데 회장,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며 “신동빈에게는 어떠한 권한이나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70년간 롯데그룹을 키워온 아버지인 자신을 배제하려는 신동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후략)』

(서울경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을 통해 공개한 대국민 사과문 영상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영상 /방송화면 캡처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롯데그룹을 키워온 아버지를 배제하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후략)』

(파이낸셜뉴스)= 『3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중략)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은 모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는 광운사, 그 다음이 우리 사주로 두 개를 합하면 절반이 넘는다”며 “우리사주 찬성이 있으면 지금의 이사진을 모두 바꿀 수 있다”며 자신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3일 일본으로 출국한 후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광운사 등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후략)』

(헤럴드경제)= 『“외형상은 국내 5위의 재벌이지만, 실상은 동네시장이나 슈퍼 경영 수준이다.” “임직원 23만명인 롯데가 대기업 오너의 소유물인가.”(중략)

폭로전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시작했다. 신 전 부회장은 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재계서열 5위 회장이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형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은 “교도소에 넣어라”고 해 롯데의 막장드라마는 최고 절정을 보여줬다. 신 총괄회장이 한국 롯데그룹 회장으로 신 전 부회장을 선임했다는 내용의 임명장과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및 한국롯데 회장과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는 육성 녹음도 신 전 부회장이 폭로했다.

신동빈 회장 측도 즉각 폭로전에 동참(?)했다.

신 회장측은 신영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과 5촌 조카 신동인 롯데사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에 대해 “신동주 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한 뭇 때 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신 회장 측은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대목을 강조해 부자간의 씩씩한 재산싸움으로 내비치고 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KBS와 SBS가 신동주 전 롯데 홀딩스 부회장을 인터뷰하거나 그에게 제공받은 동영상을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롯데 후계 분쟁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위 기사들은 방송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방송에 공개했다’ ‘방송사 인터뷰에서’ ‘방송사에 영상을 보내’ ‘동영상 공개’ 등으로만 표기했다. 또 서울경제는 특정 방송사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영상을 캡처해 보도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3110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donga.com) 2015년 6월 2일자 「朴 대통령의 낙타고기와 메르스」 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게시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 대통령의 낙타고기와 메르스』

by 영송맘 on 2015.06.02 in 시사클콜 잡다구리

“박대통령은 지난 중동 순방 중 낙타고기를 두 번 대접받았다”(조선일보)

중동에서 낙타고기를 대접받는 의미는 최고의 환대.

그리고서 얻어온 게 메르스는 아니겠지만...



메르스와 탄저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지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모자라 정부와 국회가 휴일까지 모두 쉰 다음
무려 10여일이 지난 6월1일 월요일에야 긴급대책회의 소집.
그나마 얼굴을 비친 대통령은
2차 확진자가 15명인지 18명인지 모르는 보고체계도 엉망
메르스 대응책은커녕 괴담 유포자 처벌 엄포요
결의에 찬 표정으로 강제성과 제제조항이 없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만 행사
하겠다고 한다.

초기 대응 실패
골든타임 놓쳐
메르스 3차 감염자 2명 발생 !!!!!

[관련 기사]

[단독] 중국 간 메르스 환자 “출국 전 검진 요청 묵살”

질병관리본부,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요청한 확진검사 2번이나 거부했다
메르스 네 번째 환자 발생, 격리시설 요청 거부당해

3차 감염 '공포가 현실로'...정부 메르스 방역 실패(종합2)

메르스 격리관찰자 1천명 초과하면 통제불능 우려

도대체 뭐 하는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

※참고 1: 저널로그 목차

	<p>(충격)일본 공포 트윗 [0] 연습만남 15.06.02 09:20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화제의 일본 공포 트위터, 최근...</p>
	<p>朴대통령의 낙타고기와 메르스 [0] 연습만남 15.06.02 08:19 “박 대통령은 지난 중동순방 중 낙타고기를...</p>
	<p>메르스 팬더믹 공포, 새삼 떠오르는 ‘박근혜의 분노’ [0] 연습만남 15.06.02 08:57 메르스 3차 감염 팬더믹 우려와 공포 속에 다시금 ...</p>

〈캡처시각 06.02 11:49〉

※참고 2: 경향신문 6월 2일자 「김용민의 그림마당」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 동아닷컴의 블로그인 저널로그의 <Old girl Diary>에 실린 것이다. 이 글은 영송맘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올렸는데, 삽입한 그림은 경향신문 6월 2일자 2면에 실린 「김용민의 그림마당」을 그대로 옮긴 것임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다른 신문의 만평을 가져오면서 아무런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위 게시물은 저널로그의 초기 화면에 다른 게시

물과 함께 버젓이 소개돼 있다. 비록 외부 기고라 할지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 3066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6년 1월 26일자 「도도맘,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경찰에 고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닷컴	머니투데이
<p>도도맘,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경찰에 고소 이동희 기자 입력 2016.01.26 14:54 수정 2016.01.26 15:00</p>	<p>[단독]‘도도맘’ 김미나씨, 40대男 ‘강제추행·폭행’ 혐의 고소 윤준호 기자, 김민중 기자 입력 2016.01.26 13:00</p>
<p>‘도도맘’ 김미나(여·34) 씨가 최근 한 남성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달 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직원 A씨를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p>	<p>일명 ‘도도맘’으로 불리는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34·여)가 최근 한 남성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달 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대표 A씨를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p>

<p>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초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폭행한 데 이어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는 것.</p> <p>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김 씨와 A씨를 상대로 각각 한 차례씩 소환조사를 했다. 김 씨는 현재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A씨가 어떤 관계인지, 김 씨가 주장하는 혐의가 실제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강용석 변호사와 사이에서 불거진 불륜설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네티즌 60여명을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고소했었다.</p>	<p>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초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수차례 본인을 폭행한 데 이어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p> <p>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김 씨와 A씨를 상대로 각각 한 차례씩 소환조사를 가졌다. 김 씨는 현재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A씨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A씨가 어떤 관계인지, 김 씨가 주장하는 혐의가 실제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강용석 변호사와 사이에서 불거진 불륜설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누리꾼 69명을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고소한 바 있다.</p>
<p><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26/2016012602172.html></p>	<p><http://cnews.mt.co.kr/mtview.php?no=2016012517530321805&cast=1&STAND></p>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머니투데이가 1월 26일 13시에 송고한 「[단독]‘도도맘’ 김미나씨, 40대男 ‘강제추행·폭행’ 혐의 고소」 제목의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토씨 등만 바꾼 뒤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단어 몇 개만 바꿔 옮겨놓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처럼 편집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2015-3092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주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5년 6월 3일자 「[사진] 모델 미란다 커, 해변서 화보 촬영 중 민망 노출」 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6월 3일자 「[포토] 미란다커, 시스루 드레스 입고 '19금 덤블링」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앙일보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앙일보)= 「[사진] 모델 미란다 커, 해변서 화보 촬영 중 민망 노출

입력 2015.06.03 오전 12:02:00 수정 2015.06.03 오전 12:02:00





톱 모델 미란다 커의 해변 노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미란다 커 19금 덤블링’ 제목으로 한 개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이는 지난 2013년 시드니 팜 비치에서 진행된 한 화장품 화보 촬영 것으로 해외 연예 전문매체 ‘Just Jared’가 공개한 파파라치 사진이다. 이날 미란다 커는

속옷이 고스란히 비치는 전신 시스루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해 함께 촬영한 소녀들과 함께 해변가를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촬영 도중 갑자기 옆으로 재주넘기(카트휠)를 선보였고 드레스 절개 부위가 열리며 민망한 노출 장면을 연출했다.

한편, 미란다 커는 2013년 할리우드 배우 올랜도 블룸과 이혼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최근에는 올 누드에 청제킷만 걸친 아찔천만한 화보로 눈길을 모았다. 또한 그녀는 호주 '바자' 매거진 3월호의 표지 모델로 나왔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미란다 커SNS,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포토] 미란다커, 시스루 드레스 입고 '19금 텀블링'』

최종수정 2015.06.03 08:28 기사입력 2015.06.03 07:57



미란다커,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미란다커의 패기 옆 덤블링’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공개 됐다.

사진 속 미란다커는 속옷이 고스란히 비치는 화이트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덤블링을 하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 2013년 한 화장품 화보 촬영 컷으로 해외 연예 전문매체 ‘Just Jared’가 공개한 파파라치 사진이다.』

※참고 : 저스트자레드 원본사진



2. 위 보도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모델 미란다 커가 2년전 시드니 해변에서 속옷이 비치는 흰색 드

레스를 입고 화장품 화보 촬영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랐다고 소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랐다”는 설명만 한 줄 붙인 채 워터마크가 삭제된 사진을 대량 게재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은 2013년 2월 11일 해외연예 전문매체 저스트 자레드(Just Jared)가 보도한 것이다. 당시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 미디어인 AKM-GSI가 보유한 것으로, 해당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스트 자레드는 AKM-GSI에게서 사진을 구입, 출처를 표기하고 보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일보는 워터마크를 지우고 무단으로 게재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해당 사진을 퍼 담아 올린 것이다. 이러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③(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출처를 밝혔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출처는 해당 출판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게재됐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게재한 사진도 가랑이를 벌린 상태에서 팬티가 훤히 드러난 모습이어서,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선정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한편 아시아경제는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만 설명하고 해당 사진 2장만을 게재했으나, 아예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사진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③(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2015-116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북일보 발행인 한국선
2. 경북매일 발행인 최윤채

주문

경북일보 2015년 5월 13일자 6면 「영일만항 환동해권 물류거점화/이강덕 시장, 중·러 순방길」 제목의 기사의 관련사진, 경북매일 5월 27일자 5면 「대구 지하철객차 낙서 범인은 외국인」 제목의 기사의 관련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경북일보 5월 13일자 6면



경북매일 5월 27일자 5면

경북일보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5월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국제여객터미널을 둘러보는 장면을 촬영한 포항시 제공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

경북매일은 5월 10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에서 전동차에 스프레이로 대형낙서를 하고 달아난 범인이 외국인 남성 2명으로 드러났다는 사건 기사와 관련해 대구 수성경찰서가 제공한 문제의 전동차와 낙서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7 신문윤리강령 위반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성철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5년 8월 10일자 25면 「국내 첫 승은 다음 기회에」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9일 제주 오라CC에서 막을 내린 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공동 8위에 그쳐 국내 대회 생애 첫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룬 박인비가 2번홀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뒤 갤러리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국내 첫승은 다음 기회에」 제목으로 갤러리 환호에 답하는 박인비 선수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런데 위 사진은 KLPGA가 제공한 것인데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통신사인 뉴스1은 위 사진을 싣고 “(KLPGA 제공)”이라고 출처를 밝혔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238 신문윤리강령 위반

忠淸日報 발행인 조승남

주문

忠淸日報 2015년 8월 20일자 14면 「단양 소백산 연화봉에 핀 ‘마타리’ 가을의 전령사된 ‘무한사랑’」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忠淸日報은 충북 단양 소백산 연화봉 정상 부근 야생화 군락지에 핀 마타리꽃을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위 사진은 단양군청이 제공한 것이다. 같은 사진을 게재한 울산매일은 인터넷 판에서 <단양군청 제공>이란 출처를 밝혔다.

忠淸日報의 위 사진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103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朝鮮日報 발행인 홍준호
2. 한국일보 발행인 이준희

주문

朝鮮日報 2016년 1월 16일자 A22면 「9년 만에 ... 세계 최강과 붙게 된 한국 테니스」 제목의 사진, 한국일보 1월 16일자 16면 「“정현, 조코비치를 시험에 들게 할 것”」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朝鮮日報)=



(한국일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과 한국일보는 뉴시스가 1월 4일 23:52 송고한 「정현, 시즌 첫 경기 승리 … 16강 칠리치와 격돌」 제목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 이 사진은 정현이 4일 호주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브리즈번인터내셔널단식 본선 1회전에서 샘 그로스(호주·60위)와 경기를 벌이는 장면이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3096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이종환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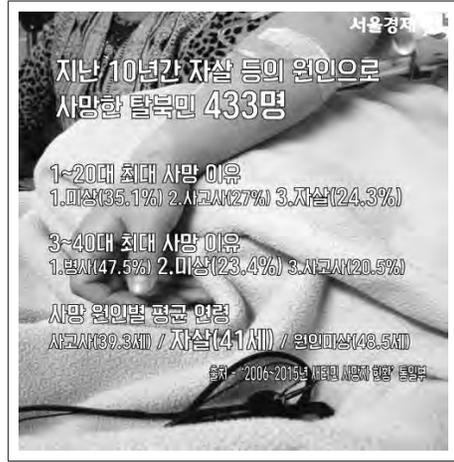
서울경제(economy.hankooki.com) 2016년 2월 8일자 「[그래픽뉴스] 소수자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탈북민」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사진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픽뉴스] 소수자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탈북민

이○○기자 p***lies@sed.co.kr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제3의 국민'

정부 용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불리는 탈북민들은 자신들을 '제3의 국민'이라 규정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해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입국과 동시에 하나원에서 125, 225가 표시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 자체에 낙인효과가 있다. 표면적으론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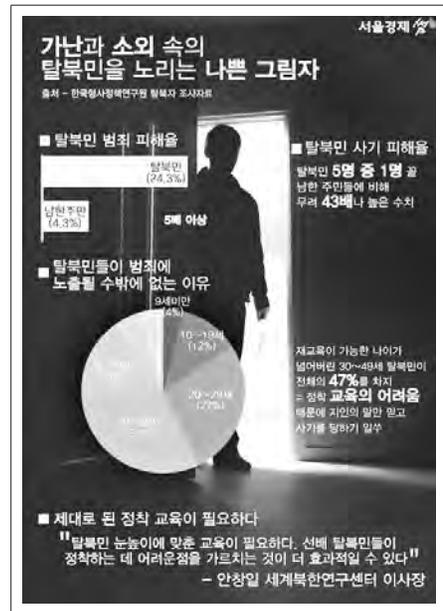
탈북민이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로 첫손가락으로 꼽는 것은 경제력이다. 하나원 퇴소 후 400만원의 정착금 이외에 기초생활비가 지급이 되지만 이것으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착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기술로 직장을 얻으려 시도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러나 신분을 숨기기도 쉽지 않다. 정착 과정을 낱알이 감시하는 보안과 형사들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 탓에 탈북민들은 어렵사리 잡은 직장에서 쫓겨나기 일쑤다.

그래서 그들은 공사장의 잡부 같은 단순노무종사자나 식당 서빙 같은 서비스 종사자로 일하는 비중(55.7%)이 상당히 높다. 자연히 보수가 적은 직업군에 몰려 있다 보니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안창일 세계북한전략센터 이사장은 “북한에서는 일부 당 관료를 제외하고는 다들

비슷한 계급으로 묶여 계급 상승을 위한 노력이 덜하지만, 상대적으로 계급적 스펙트럼이 넓은 우리나라에서는 노력 없이는 바로 하층부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식적으로 고착화 돼 있는 북한식 사회구조가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력 격차로 인한 패배 의식 때문에 탈북민들의 자의식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2015년 통일부에서 탈북민 사망자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10~40대 사망원인 순위 중 5위 안에 항상 자살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10~20대 사망원인 중 24.3%가 자살로 조사돼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줬다. 탈북민 A(35·여) 씨의 남편은 지난 2014년 10월에 안타깝게도 죽음을 선택했다. 북한 사회에서 장마당 거래로 상당한 부를 쌓았던 그는 탈북을 결심하면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들처럼 되겠다는 꿈을 꿴다. 그러나 북한에서 쌓은 부는 남한 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적은 규모의 정착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삶을 비관하다 끝내 죽음을 택한 것이다. A씨는 이런 상황에 놓인 탈북민들이 자신의 남편 뿐 아니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탈북민이 북한과 남한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고민하다 상당한 박탈감을 느낀다는 얘기다. 그러나 탈북민을 관리하고 정착을 도와줘야 할 정부 당국은 이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탈북민들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던 탈북인 사업가 한성무역 한필수(51)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탈북민 쉼터를 범행장소로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을 이용해 탈북민들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월 1.5%, 연 18%의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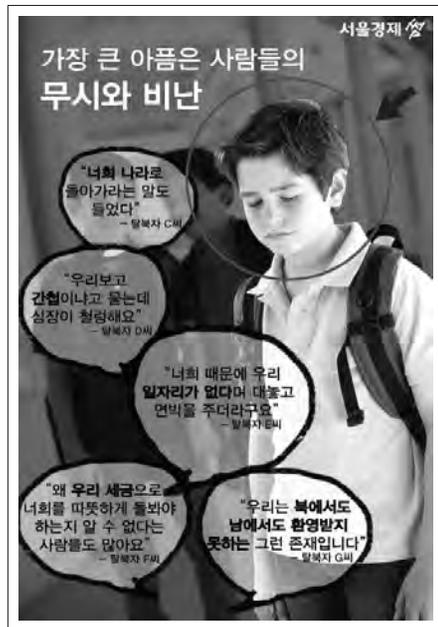


탈북민을 노리는 '나쁜 그림자'

를 중용했다. 교육 기회의 불균등으로 남한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의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할 제안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들의 희망을 짓밟고 중국으로 도피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사건은 탈북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경기 파주지역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연 매출 400억원을 올리는 성공한 탈북민 사업가로 신망을 쌓았던 그는 자신의 범행 대상을 다름 아닌 자신의 입장을 잘 알아주고 쉽게 설득당할 수 있는 탈북민들로 골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탈북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탈북민들은 남한 주민에 비해 5배 이상 범죄에 노출돼 있었고, 특히 사기 피해 건수는 무려 4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민들의 주요 성비가 여성인데(북한에서는 여성 교육 정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 주로 탈북하는 연령대가 재교육이 힘든 30~49세(47%)인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어려운 상태다. 안 이사장은 “탈북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시급하다”며 “선배 탈북민들이 스스로 정착하는 데 어려웠던 점을 가르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 7년차 B(30·여) 씨는 요새 밖을 다니기 두렵다. 동네에 탈북민이란 사실이 알려진 후로 길을 지나다 날 때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자신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부터 앞선다.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사신을 넘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데 ….”라며 말꼬리를 흐리지만 인터뷰 내내 연신 눈물은 뺨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은 그저 비판받아야 할 잠재적인 ‘간첩’으



배타적 태도 또한 탈북민 박탈감의 큰 이유

로 치부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적으로 갈등이 빈번해지면 자연히 그 화살은 탈북민에게로 향한다.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때도 마찬가지였다. 말투를 듣고 뉴스 속 북한정권에 대한 반감을 탈북민에게 고스란히 표현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못한다.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 상당한 배타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북한의 삼엄한 감시와 중국에서의 핍박, 제3국을 경유 해야만 하는 만만치 않은 입국 일정을 버텨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들에 대한 대접이 이와 같아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탈북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정부 지원은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며 “탈북민과 남한주민의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적인 기회가 잦아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는 말이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조국이라고 생각한 곳에서의 핍박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입력시간 2016.02.08 10:01:11

〈캡처시각 16.2.17 1:1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남한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해 소수자로 전락하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픽 뉴스 말미에 엉뚱하게도 외국 어린이 사진이 등장한다. 이 사진은 이슬람 백과사전에 실린 것이다. 한눈에 봐도 외국인으로 탈북민 어린이와는 무관하다. 언론은 부득이할 경우 기사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래픽뉴스가 사진이나 도표 위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진선택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사진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